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7월 1차



주요 현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72% 이하(2인 가구, 234만 7천 원)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 '자립지원패키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 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주는 사례관리로,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실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6.28]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AeenlOWy5-BWtHp+yUh48Ti6.mogef10?mid=news405&bbtSn=708628

수사기관 64개소,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시범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는 2022년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전문강사 파견 시범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수사기관의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 일선 현장에서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조기에 안착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
- 여성가족부는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7월부터 전체 647개 수사기관 중 참여를 신청한 64개소(2,812명)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 계획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6.2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AeenlOWy5-BWtHp+yUh48Ti6.mogef10?mid=news405&bbtSn=708620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 코로나19와 다양해진 매체환경으로 청소년이 미디어 노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2021년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
-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을 요청한 10대 청소년과 사이버범죄로 검거된 10대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신속한 심의·차단을 추진하고, 경찰 위장 수사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길들이기(그루밍) 등 온라인 성착취 엄중 단속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06.2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AeenlOWy5-BWtHp+yUh48Ti6.mogef10?mid=news405&bbtSn=708631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 지속 증가

☑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책자 발간

- 2021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45,379명(48.1%)으로 2020년(136,071명, 46.6%) 대비 1.5%p 증가했으며 5급 이상 공무원 25,431명 중 여성은 6,171명(24.3%)으로 2020년 대비 3.5%p 증가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06.30]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92780

제1회 여성기업 주간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법 개정으로 여성경제인의 날(7월 6일)을 포함한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주간으로 지정, 국민경제에 공헌한 여성기업인 포상 및 '제1회 여성기업 주간 개막행사' 시행

참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2.07.05]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dx=1034678&parentSeq=1034678Sn=708583>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돌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2022-06-27	현재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개정하여 제도 실효성 도모(안 제19조의2)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38인)	2022-06-28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기록·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이행 도모(안 제1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의원 등 10인)	2022-06-29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수를 최대 20명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2022-06-3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적절한 조치 시행(안 제53조제7항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2022-07-01	보육에 관한 서비스가 지역별 차이가 없도록 국가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안 제7조제1항 및 제3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2-07-01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회복지시설등의 운영이 축소되는 경우를 긴급돌봄 기간 연장사유에 포함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사용 보장(안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의2제5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의원 등 10인)	2022-07-05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신청 한도를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자녀 돌봄 환경 보장(안 제19조의2제4항)

가족·돌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2022-07-05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시설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2022-07-06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가권 실질적으로 보장(안 제22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및 안제39조제3항제8호)
저출산·고령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5인)	2022-06-29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안 제15조의23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2022-07-05	대학의 장은 입학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에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안 제34조)
건강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2022-07-08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 향상(안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젠더폭력·안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2022-06-27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안 제9조 단서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2-06-29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취지를 반영하여,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 의사 확인 절차 등 피의자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는 한편,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전문조사관을 통한 증인신문 방식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안 제26조의2, 제28조의2 및 제29조제3항 신설,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제30조의4 신설,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제41조의2 신설, 제41조의4 신설)

젠더폭력·안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8인)	2022-06-30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대상기관에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안 제50조제5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2022-06-30	현행법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재발방지대책 제출 및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통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상에만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등의 책임 부과(안 제31조의2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2022-06-30	성폭력방지법 제5조에「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5조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2-07-01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등에 있어서도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톱킹행위자 등에게 통지(안 제7조제5항·제6항 및 제11조제4항·제5항 신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2022-07-01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미약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예방뿐 아니라 지원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현행법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안 제2조의2 및 제16조제1항)
법·계획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20인)	2022-06-30	성별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교육·행정 등의 각 영역에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안 제명 및 제1조 등)



보도자료

6.1 지방선거 평가,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은?(6.28)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bodoView.do?p=1&idx=129896>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고, 지역 정책의 성평등 제고와 여성 대표성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6.1 지방선거 결과와 여성대표성”을 주제로 제128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KWDI 연구보고서] 최저임금제도 변화와 남녀근로자의 임금 연구: 업종 및 지역구분 논의를 중심으로	6.27	프레시안	“최저임금, 모든 노동자의 안전적 삶의 영위가 핵심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2714202240958
[제128차 양성평등정책포럼] 6.1 지방선거 결과와 여성대표성	6.28	여성신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1 지방선거 결과와 여성대표성' 포럼 개최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265
	7.1		“6.1 지방선거, 여성 약진했지만 여전히 부족...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KWDI 연구보고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단 의료접근 실태와 정책과제	7.2	한국일보	“중절되나요? 미프진 있나요?”... 음지에 내몰린 여성 임신중지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821530001861?did=NA
	7.4	머니투데이	美 낙태권 폐기 판결에 낙태약 수요 폭증...국내서 못사는 이유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0415231366018
2022년 네팔 성인지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7.4	BBS NEWS	여정연, 네팔 공무원 대상 '성인지적 환경 구축' 온라인 연수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221
제23회 한국여성경제포럼	7.6	아시아경제	여성기업주간 기념 포럼...“중소·벤처와 여성기업이 경제중심 돼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70608463111154
		조선비즈	여경협, 제23회 한국여성경제포럼 개최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7/06/BWWVZKEJK5NFI7BGJLE4RFD62I
		여성신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23회 한국여성경제포럼' 열어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468
		뉴스1	“여성기업 미래는”... 여경협, 제23회 한국여성경제포럼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733521
[KWDI Brief Vol.9] 자전거 이용 문화의 성별 차이를 들여다보자	7.9	경향신문	자전거와 '사회문제'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7090300015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6.27	KBS	쑥쑥 자라는 다문화 자녀...대학 진학률은 41%에 그쳐	최윤정 연구위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95544&ref=A
	조선일보	다문화가족도 저출산... 10집 중 4집은 아이 안 낳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2/06/27/ARRHCUU52ZDXFC3M4AWD76LXM
6.28	머니투데이	수술 안 해주고 약도 못써...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한국은 '무법 상태'	김동식 선임연구위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710450933563
6.30	경향신문	청년들에게 젠더이슈는 '제로섬 게임'이 됐을까? 성평등 정책의 미래는	김원정 부연구위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6300700011
7.6	경향신문	"페미니즘 지지에 동의한다"는 2030 남성비율, 단 5.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7061459011
7.2	중앙일보	"낙태, 여성이 판단할 의료 문제" vs "임신 6주 이후엔 금지"를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3775
7.6	MBC	[집중취재M] '스토캅처벌법' 실행은 0명... 40%는 재판도 안 받았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5636_35744.html
7.8	여성신문	K-ESG 가이드라인, 성평등 지수 주요하게 다룬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10

유관기관 연구동향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 발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루어진 인공임신중절 실태 파악 조사로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 및 변화 분석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2022.06.30.]
<https://www.kihasa.re.kr/news/press/view?seq=47320>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사이버폭력 정의규정 신설과 플랫폼 책임강화를 중심으로(국회입법조사처)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2.07.05.]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9609>